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8월 20일 (화)
담당	조현수	페이지	총 4매(붙임자료 포함)

성명서

「문정부 대책 없는 선심복지에 장애인들 꼴났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

조선일보 고맙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뿔은 팔아먹지 말기를 바란다.

조선일보는 8월 17일 기사를 통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장애인 고려장 중단하라!”며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사회보장위원회 40일 농성과 21일부터 진행될 1박 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농성의 이유를 보도했다.

눈물 나도록 고맙다. 우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31년 만에 다가온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외치며 기대했지만, 결국 예산에 갇혀 ‘가짜’가 되었다. 우리의 절박함에 대하여 이제야 조금은 긴 기사로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눈물이 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들이 실제로 받는 복지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장연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로서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로 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장애인복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주장도 조선일보식 끼워 맞추기 주장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라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하는 투쟁으로 연결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

있고, 향후 함께 상호 보충하며 발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충돌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보도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방향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충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해결해야할 현재의 절박한 과제이다.

현재의 절박한 과제를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이자 공약 충돌로 규정하는 기득권자들의 탐욕을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이간질하며 이용하려는 조선일보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31년 만의 변화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짜로 만들려는 위선적인 세력이 있다.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다. 가짜를 만들려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며 혹독하게 차별해온 사회 구조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장애인에게 다가온 31년 만의 변화를 시혜와 동정의 구호물품 배급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은 그대로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조선일보가 지목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다. 조선일보는 장애인의 뿔을 기득권자들의 탐욕의 약재로 착각하고 팔아먹지 말기를 바란다.

2019. 8. 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자료] 해당 조선일보 기사

文정부 대책 없는 선심복지에 장애인들 뿔났다

조선일보

- 윤수정 기자
- 천홍희 인턴기자(건국대 행정학과 4학년)

입력 2019.08.17 03:00

장애인들 "현정부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 집단 행동 나서

"장애등급제 진짜로 폐지하라." "장애인 고려장 중단하라."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 등 40여명이 16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이렇게 외치더니 8차선 도로를 점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1박2일 투쟁 집회를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도 늘렸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단체의 숙원이었고,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들이 실제로 받는 복지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끼리 서로 충돌한 탓에, 예산을 더 들이고도 효과는 오히려 축소된 것이다.



16일 오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차도를 지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약 3.6km를 행진했다.

/김지호 기자

문 정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복지 서비스 이용·탈락 여부를 결정하던 장애등급제를 변경, 중증(기존 1~3급)과 경증(4~6급)으로만 나누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존 1~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목욕·외출 등 '활동 지원 서비스'(도우미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도 1조35억원으로 작년(6907억원)보다 45% 늘려 잡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상승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은 사실상 도우미 인건비다. 이것이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20.5% 올랐다. 반면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은 7만1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14.1% 늘었다. 전장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지급 대상 증가로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6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치매국가책임제'도 장애인 복지에 타격을 줬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몸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웬만한 중증 장애인도 기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신 혜택이 더 적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편입시켰다. 하루 24시간 내내 무료로 돌보미의 보살핌을 받던 중증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는 최대 4시간밖에 돌보미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문 정부 정책에 대해 "예산 반영 없는 단계적 사기"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종합조사 배점 기준까지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장애 정도가 심해 종합조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 한 달 최대 480시간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전장연 측은 "배점 기준이 바뀐 뒤 최고 점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2520명 중증 장애인 대상 새 종합조사표를 모의 평가해 본 결과, 30%는 활동 지원 시간이 전보다 감소했고 7%는 활동 지원 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중증 장애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했다. 한 장애인 가족은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1급인 60대 아버지가 혼자 대소변도 식사도 해결하지 못함에도 전보다 지원 시간이 줄어들어, 집안 돈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쓰려니 너무 힘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 충돌이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고 말한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스웨덴 등 해외 북유럽형 복지 국가들은 복지 공약 예산 계획을 촘촘히 짠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관련 대선 공약 1호였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무늬만 그럴 듯한 제도가 됐다"고 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더도 말고 필요한 만큼만 제대로 받겠다며 요구한 등급제 폐지를 예산 고민 없이 해 다 같이 기존보다 덜 받게 생겼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문제가 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7/2019081700150.html